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수사 속도 내나

서울대병원 '병사'서 변경...경찰청장 오늘 입장 발표

유족 "이제라도 고쳐져 다행...책임자 수사 이뤄져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이제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측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바뀌자 사망진단서를 변경했다며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재발급된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만에 바뀌게 됐다. 병원이 사망자의 사인의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외상 후 정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딸인 백도라지(35)씨는 "이제 외인사로 확정된 만큼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시 직사 살수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 사망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인사로 사인이 변경된 직후 이 경찰청 공식 입장을 내기로 방향을 바꾼 만큼 입장문에는 백씨의 사망에 대한 유감 표명

또는 사과와 함께 향후 집회·시위 관리에서 인권권을 더욱 고려하겠다는 자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병사로 사망원인이 기재됐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망진단서에 원인을 병사로 작성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은 범죄적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새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느리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 수사가 이번 사인 수정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백씨 사망 사건 처리를 미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317일간의 투병 끝에 작년 9월 25일 사망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죄송합니다”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광주서 가장 극성 왜?

전국 한방병원 3곳 중 1곳 광주에...두달간 41건 196명 적발

#1.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3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과 한의사를 구속했다. 또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허위입원시키는 등 자녀까지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

#2.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 위반 등 범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폭력조직 5개파 11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 폭력조직이 보험사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보험사기가 전국에서 가장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두달간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건 196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동기(11건 32명) 대비 6배 이상 검거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사무장병원 11건을 비롯해 25건 870명에 달해 보험사기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각종 지표도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84억원, 검거인원은 498명으로 1인당 편취 금액이 1686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865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 광주지역 자동차 책임보험 손해율은 78.2%로 전국 평균 65%보다 13.2%포인트 높고,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은 58.4%로 전국 평균 35.9%를 22.5%포인트 웃돌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범죄는 주로 한방병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국 한방병원 296곳 중 33%인 98곳이 광주에 집중돼 있다. 전국의 한방병원 3곳 중 1곳은 광주에 있다는 의미다. 일반 병·의원인 경우 전국의 3%(984곳)만이 광주에서 운영되는 것과 대조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A(7)양이 전모(여·43)씨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였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전씨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도로(양복 2차선)를 건너가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지속 30km를 준수하면서 주위를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를 상대로 규정 속도 준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급 300~2000원 주고 입원환자 일 시켜

29명 노동력 착취 병원장 수사 허위 서류 꾸며 보험금 편취도

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시급 300~2000원을 주고 강제노동병원을 시킨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세탁 등 노동을 강요한 뒤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위반 등)로 전남지역 모 정신병원장 하모(62)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청소·세탁수선·중증환자 간병 등을 강요한 뒤 임금의 대부분을 편취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지적장애·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롭거나 형편이 어려운 29

명에게 접근해 일을 시킨 뒤 시급 300~2000원만 지급,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미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28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경우 최근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8000여만원이 나는 등 경영이 안정적이었는데도 정식 고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하씨가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했는지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씨는 "근로를 통한 재활 치료였고, 일부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노동노동청과 국세청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립이나 농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남구노조 "흥기 난동 구의원 제명하라"

집회 열고 천막농성 돌입

경찰, 구의원 불구속 송치

"광주시 남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흥기소동을 벌인 A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를 수개월간 열었다는 이유로 청사로 흥기를 들고와 노동조합 측 피켓을 훼손한 광주시 남구 A의원과 관련, 노조(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측이 "A의원을 제명하라"고 15일 남구의회를 겨냥했다.

노조는 또 "남구청·남구의회 청사관리 책임자인 남구청장도 수수방관 말고 A의원으로부터 공무원, 민원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공공청사에서 흥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의원 제명을 촉

구하는 집회를 연 뒤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A의원은 지난날 11일 오전 9시께 남구청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진,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2점을 흥기로 훼손하는 등 수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수개월간 자신과 대립 중인 노조 측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

양 측은 A의원이 지난해 12월 소속 상임위원과 마찰을 빚었던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A의원이 당시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의원을 뒷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이에 맞서 노조 측이 "갑질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말라"고 맞서면서다.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사도 안 받고 따돌린다"...선배 휴대전화 화장실에 버려



○"대학교 선배가 인사도 안 받고 나를 따돌린다"는 앙심을 품고서 선배의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철없는 대학교 새내기가 경찰 사형.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대학 실습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선배 B(23)씨의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나와 건물 화장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혐의.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군을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선배가 매점을 간 사이 책상에 놓여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B선배가 평소 내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며 때늦은 후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대형 모텔, 회사 사정상 매매.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20일 오픈예정
- 동업 하실분 환영!
- 연 순수익 3억정도 가능
- 연수원, 수련원 등 기타시설 이용 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